

 국토교통부		<b>보 도 자 료</b>	
		배포일시	2018. 6. 5.(화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감사담당관	담 당 자	• 과장 김종학, 사무관 이정복, 주무관 주광돈 • ☎ (044) 201-3102, 3115
보 도 일 시		2018년 6월 5일(화) 15시이후 보도 가능합니다.	

## 수공 4대강 문건파기 의혹 조사결과, 수사의뢰 등 조치

### 총 302건 기록물 미등록, 파기절차 미준수 등 기록물법 위반

- ◆ 수공에는 기관경고 조치하고, 기록물을 파기하려 한 책임을 물어 기관 전반 총괄 책임자인 사장에 대하여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수사의뢰
- ◆ 4대강 기록물에 대한 관리소홀 등 관련자(5명) 중징계 요구
- ◆ 일반기록물 미등록 및 파기절차 미준수 등 관련자(10명) 경징계 요구
- ◆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등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오늘, 국가기록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한국수자원공사(이하 “수공”)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.

※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은 지난 1.18 수공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언론보도 즉시 국가기록원과 함께 수공에서 파기하려던 기록물을 회수하여 분석 및 조사 진행

○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은 현장에서 수거한 문건 등 자료를 검토하고, 국가기록원 점검결과를 통보받아 관련법규 위반여부 등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사의뢰와 중징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.

- 302건의 기록물(국가기록원 확인결과)에 대한 기록물 미등록과 파기 절차 미준수 등 관련법규(공공기록물법)를 위반한 총괄책임을 물어 수공(기관)에게는 기관경고 조치하고, 기관 전체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이 있는 사장(이학수)에 대하여는 수사의뢰 하는 한편,
  - 4대강 기록물에 대한 미등록 및 폐기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 등에게는 4대강 사업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이 영구인 점 등을 감안, 중징계를 요구하였고,
  - 나머지 일반기록물 미등록 등 관리소홀과 폐기절차 미준수와 일반 자료 폐기절차 등 미준수, 기타 기록물 관련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게 징계요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.
  
-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와 같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기록물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일제히 지시하였고,
  - 아울러, 앞으로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저하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.

  <p>공공누리 3종지위를 자유이용영역</p>	<p>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이정복 사무관(☎ 044-201-3102), 주광돈 주무관(☎ 044-201-311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-